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기업, 지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때

백선희 소장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그만큼 어린 시기부터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에서 삶의 질을 먼저 살펴보는 방향으로 정부가 선회한 것도 이러한 까닭일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별도 조직으로 신설되고, 포용적 아동국가정책의 발표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노력, 그리고 민간 기업의 기본적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아동의 가장 보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는 중요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며, 국가의 아동에 대한 책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초 선별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보편지급 됨에 따라 아동이라면 누구나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9년 4월 기준 전체 아동 수 대비 97.6%가 수혜 받고 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 본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은 직장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부모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부모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모가 일하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결국 아동들은 유년기부터 일터에 부모를 뺀기며 기본적인 발달과 보호에 대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물론 이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지원 등 정부의 정책이 보완하고는 있으나, 돌이 채 되지 않은 영아들까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보미의 손에 자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지점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무엇보다 아동들이 협력해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민간단체인 인증에 의존하여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진단해본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인증과정에서 겪게 되는 공무원 조직과 NGO 단체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담당 부서에 따라 존재하는 행정 칸막이 등은 자칫 아동친화도시가 문서상에만 존재하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은 캠페인이나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협력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더욱 성숙해 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